

TRADE BRIEF

No 01

2025.03.24
ISSN 2765-6004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그린성장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EU가 최근 상반된 정책적 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파리협정 재탈퇴 등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이며 자국 에너지 개발과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 정책 제안으로 기존 그린딜 기조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십을 동시 추구하는 '친(親)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그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과 EU의 서로 다른 정책 방향 속에서도,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추구형 탄소중립 전략'을 위한 입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우위 분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은 분야별 위기와 기회 요인을 반영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ESG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1. 2025년 美 vs. EU 그린성장 전략 변화

1-1. 최근 美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

- ▶ **(핵심기조)** 미국은 '美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하에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고 자국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반(反)그린 정책 추진 중
 -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UNFCCC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 데 이어,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발전을 공식화
 - 화석연료 등 에너지 자원 생산·활용 확대, 관련 규제 철폐, 그린뉴딜 폐기를 명령하고, 국내·외 친환경 산업 및 기후 대응 금융 지원을 철회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 자립에 초점
- ▶ **(행정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행정조치(행정명령, 각서, 선언) 114건('25.3.11 기준) 중 에너지·기후 관련 행정조치는 21건(행정명령 15건/각서 4건/선언 2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
 - 화석연료 규제 축소/폐지, 미국 우선주의 적용, 에너지 자원 발전, 대통령 직속 에너지 자립 위원회 설립, 그린성장 관련 해외 자금지원 재검토, 국제협약 탈퇴, 펀딩 축소 등 '반(反)그린성장형' 조치 시행

트럼프 2기 에너지·기후 관련 행정조치

구분	행정 조치 및 주요 내용
자국 에너지 발전 (10건) 행정명령(E) 6건 각서(M) 2건 선언(P) 2건	(E)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1/20) * 에너지 자원 생산/인프라 촉진 비상 권한 사용 지시
	(E) 미국 에너지 개발(1/20) * 규제철폐, 화석연료/LNG 확대, 전기차 의무화 폐기
	(E) 알래스카의 특별한 자원 잠재력 개발(1/20) *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우선시
	(E) 미국 국무부 '미국 우선' 정책 지침(1/20) * 국무부 정책과 美우선 외교정책 간 일치
	(M) 연방 외변 대륙붕 지역의 해상 풍력 임대 철회 및 연방 정부의 인허가 관행 검토(1/20)
	(M) 미국 가정에 긴급 가격 완화 제공 및 생활비 위기 극복(1/20)
	(P)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2/10) * 관세인상, 면제/쿼터/GAEs 폐지, 美제품 예외신설
	(P)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2/10) * 관세유지/재부과, 면제/쿼터 폐지 美제품 예외신설
	(E) 국가 에너지 자립 위원회 설립(2/14) * 에너지 생산확대, 전력/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촉진
	(E)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대응(2/25) * 국가 안보 위협 조사(Section232), 잠재적 관세 검토
글로벌 기후 대응 (3건) 행정명령(E) 3건	(E) 미국 대외 원조의 재평가 및 재조정(1/20)
	(E) 국제 환경 규약에서 미국 우선주의 적용(1/31) * 파리기후협약 즉각 탈퇴, 국제 기후금융 지원 즉각 폐기
	(E) 종이 빨대 구매 및 강제 사용 종료(2/10)
규제 기반 마련 (8건) 행정명령(E) 6건 각서(M) 2건	(E) 대통령 직속 '정부 효율화 부서' 설립 및 시행(1/20)
	(E) 유해한 행정명령 및 초기 조치 철회((1/20) * 기후변화·환경 규제(금융지원, 환경 정의 의무) 폐지
	(M)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1/20) * 관세 정책 강화, 협정 재검토, 불공정무역 관행 조사
	(E)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1/31) * 전·차 의무화 폐지, 청정에너지 보조금 중단, 배출가스 기준 완화
	(E) 대통령 '정부 효율화 부서' 인력 최적화 이니셔티브 시행(2/11)
	(M) 상호 무역 및 관세(2/13) * 국가별 구체적인 세부 대응 조치 발표 예정
	(E) 합법적 정부 운영보장 및 대통령 '정부 효율화 부서' 규제완화 이니셔티브 시행(2/19)
	(E) 대통령 '정부 효율화 부서' 비용 효율화 정책 시행(2/26)

* 자료 : Federal Register (2025.3.11. 검색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무역규제)** 보편관세 대안으로 '탄소세'를 검토하고 있어 청정경쟁법(CCA), 프루브잇 (PROVE IT) 법안,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을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보편관세 부과의 대체 수단으로 '탄소세'가 무역정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그린성장전략 차원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의 역할

-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규정

* 초기 탄소가격은 55달러로 설정되며 2025년 12개 품목, 2027년부터는 모든 완제품으로 확대 예정

* 민주당이 CCA를 최초 발의('22)하였으나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평가됨

- 프루브잇(PROVE IT) 법안은 특정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탄소세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

* 22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제품 전주기에서 발생한 배출집약도를 에너지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

- 해외오염관세법(FPFA)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특정 제품군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초안] 16개 품목 → [수정안]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에 15% 관세부과

* FPFA는 공화당 의원 주도로 수정 발의('23.12)된 법안으로 민주당도 지지하는 초당적 법안

1-2. EU의 지속가능성 정책 방향

▶ **(핵심기조)** EU는 그린딜 성장 기조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더해 정책적으로 그린성장 전략을 확대하고 EU 공급망의 안정화와 청정산업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추구

- 집행위는 EU 그린딜 탈탄소화 목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쟁력 나침반(‘25.1.29)」 5개년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정책 발표
- 미·중과의 혁신격차 해소,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 공급망 안보 등 3대 핵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단순화, 금융경쟁력 회복 등 5대 과제를 제시
- 규제 단일화로 핵심 산업 지원, 에너지 가격 안정, ‘전기화 행동 및 그리드 패키지’ 계획,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투자, 청정산업딜, 지중해 연안 에너지 및 청정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핵심원자재 구매 플랫폼 등 세부 입법·전략 과제를 발표

▶ **(행정조치)** 폰데어라이엔 2기 EU집행위원회 공식 출범(‘24.12.1) 이후 첫 주요 정책으로 「청정산업딜(‘25.2.26)」, 「옴니버스 패키지(‘25.2.26)」 등을 발표

- 첫 번째 산업정책인 「청정산업딜(‘25.2.26)」은 탈탄소화, 재산업화¹⁾, 혁신 기반 에너지 비용 안정화와 청정기술 시장 선도, 청정산업 투자 확대, 순환경제, 청정 무역·투자 파트너십, 청정산업딜(자동차 등) 촉진 등을 위한 입법·전략 과제를 담고 있음
- 이 중 최근 발표된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25.3.5)”은 첨단기술 혁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유연성 확대를 비롯하여, 배터리 공급망 탄력성 확보²⁾를 강조
- 또한,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적정가격 에너지 조치계획(‘25.2.26)」을 발표하고, 에너지 가격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응 등 세부 조치를 제시
- 아울러, 분야별 규제 간소화 및 그린 투자 촉진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25.2.26)」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으며, 동 제안에는 EU의 지속가능성장과 관련된 5개 법률의 개정이 포함됨³⁾
- 동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탄소노미, InvestEU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았으며, CSDDD와 CSRD 시행을 연기하는 별도의 입법 제안도 포함됨⁴⁾

1) 재산업화(reindustrilize)는 청정기술 및 탄소중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제조업(탄소저감 철강 등), 반도체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이 동 산업의 핵심(KBAEurope, 2025.2.28.)

2) 역내산 배터리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배터리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역내 제조사 비가격 기준 도입 등 직접적 지원, EU 자동차 부분에 대한 해외 투자 확보, 규제 간소화 추진을 포함(KBAEurope, 2025.3.6.)

3)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참조

4) CSRD, CSDDD 및 CBAM의 수정은 공동 입법자가 합의하고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때만 발효됨

▶ **(무역규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직면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그린딜을 달성하고자 정책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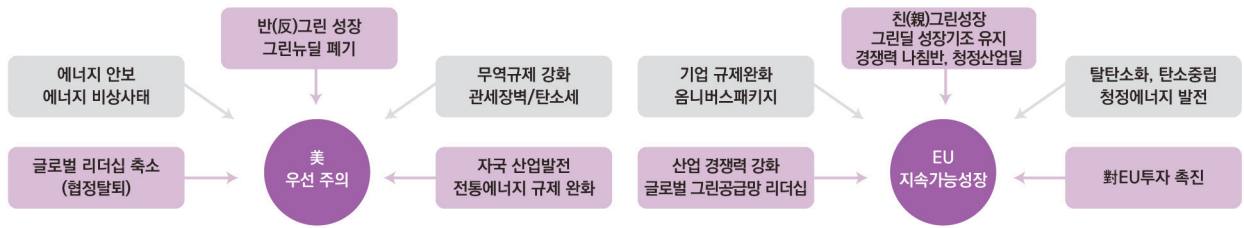
- **(CSDDD)** 동 지침에서 '전환이행' 의무를 삭제하고, 이해관계자 정의에서 간접적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며, 실사대상 중 간접 파트너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또한 회원국이 더 엄격한 규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벌금의 최소 상한선(전세계 매출액의 5%) 기준을 삭제하고, 기업 평가 주기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
- **(CSRD)** 임직원수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대상 기업 범위 축소, 비상장 기업의 적용시기 연기, 비상장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공시기준 제공, 상장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 기관의 공시 의무 제외 등
- **(CBAM)**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을 소량 수입하는 업체 면제 적용, 배출량 계산법 선택에 자율성 부여, 인증서 관리 비율 50%로 축소,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1년 연기 등
- **(EU Taxonomy)** 공시 면제 대상 확대, 부분 보고 허용으로 점진적 전환 지원, 공시 서식 단일화, 특정 KPI(거래계정·수수료·커미션 등)의 시행 2027년까지 연기 등
- **(Invest EU)** 중소기업 기준을 변경하여 직원 2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대출 보증한도 확대, 10만 유로 미만 투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

2. 정책 비교 및 파급효과

▶ **(정책 비교)** 미국과 EU는 모두 에너지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성장을, EU는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친(親)그린성장 채택

- 미국은 자국 에너지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신재생 에너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反)그린성장형 전략을 취하고 있음
- EU는 회원국의 그린에너지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그린 공급망 리더십 유지를 위한 친(親)그린성장 전략을 지속

미국 vs. EU 그린성장 정책 비교



자료 : 미국, EU 공식 발표 정책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파급효과)** 미국은 그린성장 약화로 전기차, 필수 소비재 등의 투자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한편, 미국과 EU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로 원전, 플랜트, 조선 산업의 시장 확대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

• **(미래 모빌리티)** 미가격경쟁력 저하, EU의 그린공급망(원료, 배터리셀, 시장수요) 리더십 강화

- 미국은 화석연료 규제를 철폐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과 인프라투자법(IIJA법)에서 전기차 지원을 줄이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 EU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에너지/플랜트)** 美·EU의 광물 확보 경쟁 격화, 원전 발전 및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기회 확대

- 구리,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광물과 희토류 등의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심화로 그린 공급망 블록화⁵⁾가 이루어지며 ESG 공급망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고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

- 또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양 지역 모두 소형원자로(SMR)에 대한 사업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미국은 특히 석유·가스 시추 증가에 따른 플랜트 시장 확대

• **(운송/중공업)** LNG·LPG 운반 선박 수요 증가,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 항만·기자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 표준 선점이 중요해질 전망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천연가스 확보 경쟁으로 고부가가치 초대형 LNG 운반선, LPG 운반선 개발 및 발주 수요가 증가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플랜트 사업 확대

• **(필수 소비재)** 친환경 규제완화와 원재료 조달 비용 하락으로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

- 규제 대응과 정책 활용을 위한 현지 생산 기반 구축과 더불어 기업의 ESG 인증·관리 역량 제고, 차별화된 마케팅 필요성이 증대

5) 글로벌 협력과 분업을 통한 공급망 구축이 아닌 보호주의 등에 기반하여 미국 중심, EU 중심, 중국 중심 등 블록화를 통해 상호 경쟁적인 공급망을 형성하여 기술/표준의 단절, 경제적 비용 상승, 공급망 리스크 증가 등을 초래하는 공급망 재편 현상

3. 결론 및 시사점

- ▶ 美·EU는 상반된 그린 정책적 노선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 모두 전략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장추구형’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정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규제' 에서 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가 요구됨

- 그린 공급망 정책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 체계 구축 지원 필요

- 우리 기업이 앞서 있는 분야에서 국제 기준(ISO, 녹색분류체계 등)과 각국 규정에 한국에 유리한 조항이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

- 한국의 SMR과 친환경 선박 같은 첨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또한 원전·조선 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발굴·기획 전담기구 운영, ODA·산업단지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한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 수출 전문 금융 프로그램 신설

- **(기업: 무역규제 불씨 여전)** 국가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중립과 ESG는 지속될 것으로 보며 탄소세, 지속가능성보고 의무,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 분야 발굴과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속 가능 성장과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美·EU 그린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무역규제로 작용되므로 ‘양립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모색

- * 반(反)그린성장과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차 시장 지위를 확대하는 한편, ESG 경영을 내재화하여 탄소중립 흐름에 편승하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추구

- 모빌리티와 필수 소비재 등 친환경이 중요한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원전(SMR 등), 에너지, 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 확보한 분야는 민관협력 프로젝트(PPP)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전기차 관련 인프라 로드맵을 수립한 중앙아시아,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지정 및 육성하는 ASEAN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對중국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